

문 대통령 “고용 회복 범부처 총력 대응”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서...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 통계 언급

“공공부문·재정 적극 역할로 고용한파 이겨야

1분기 내 9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반드시 이행

취약계층 피해 지원... 4차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강구

2월 변곡점으로 고용 회복도둑 부처 총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선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 약화도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고용 상황



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줄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

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 하겠다”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에 대응,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성경찬 전북도의원(왼쪽)과 김지애 전북도의원(오른쪽).

민주 광역의회 교섭단체협 구성

사무총장에 성경찬 도의회 원내대표 선출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공동 현안 건의 계획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은 (가칭)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5일 모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와 김지애 정책수석부대표 비롯한 13개 시·도의회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원국 경기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광역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구성시기 및 대표단 선출 등 실무적인 내용이 주로 논의됐고, 협의회는 오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건의하기로 했다.

성경찬 원내대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의회가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사무총장에 선출된 성경찬 원내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을 중앙당 등에 앞장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가동

16일 전북도청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와 지역 업체가 함께 지역 공헌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균형발전이 통일의 선결과제”

민주 김수홍 의원, 기재부 업무 보고서 충남기 부총리에 필요성 강변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서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김수홍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내남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

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강조했다.

김수홍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나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인략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조1,000억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州)가 못 사는 주(州)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수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지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쿠팡 뉴욕증시 상장, 좋은 시도로 생각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연매출 10억 원 이하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 4억원 이상(소상공인)은 한계를 두지 않고 피해를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

다.

홍 부총리는 “정의상 매출 10억원 이하지만, 매출 4억원 이하가 사실 대부분이다”면서 “4억원이라는 매출 한도를 검토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0억원 이하도 코로나 19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하시니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드린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3000억원이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지원 금액의 30%가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

보다는 저축이나 다른 자금으로 많이 갔고 소비 진작 효과는 조금 약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경기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인 건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전 국민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 두껍게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별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업이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뉴욕증시 상장을 지적하지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고용대책, 실제 체감에 맞게”

민주 윤준병 의원, “1월 취업자 감소 98만명 발표

실제 체감 취업자 감소 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6일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 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 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이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1월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가 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이전에 증가추세에 있던

취업자수가 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30만명~15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특히, 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5%이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7.2%로 조사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자 감소의 폭은 고용동향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윤준병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올해 1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가 1,7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7만명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작년 1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5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1월에는 86.7만명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사로 인한 사유 42.8만명과 취업준비 7.7만명 등 증가된 비경제활동인구 50만명은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민주 이낙연 등 지도부, 19일 청와대서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연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해 문 대통령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당대회로 이

대표 등 심의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후인 9월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선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등 정국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수립·추진 학생인권종합계획 성공 지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정책을 기획하고 인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인권구제의 실효성 증대와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국제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자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 등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옹호)관 등 인권기구를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구

제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권리에 기반한 정책과 실천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 시민으로서 인권 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강화 등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다 진일보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학생 시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21년 의정도 시민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는 이를 지지하고 환영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시의회 군장산단인입

철도 특별위 현장의정활동

군산시의회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이하 특위)가 16일 군장산단인입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특위는 인입철도 제1공구인(대야·개정·옥산)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공사와 관련해 장기간 지속된 민원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현황을 듣고 민원해소방안을 모색했다.

김경구 위원장은 “국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민원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는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21일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이다. /군산=한경봉 기자